

# 대법원 2024도6904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연구관실(02-3480-1895)

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 1, 당내경선 또는 본선거 과정에서의 선거운동 관련자인 피고인 2~4, 경영컨설팅과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 5가, 피고인 1의 당선을 위한 '좋은기업 유치업무협약식' 및 '제주 지역 관련 단체의 지지선언'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

대법원 1부(주심 대법관 신숙희)는, **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,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**(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4도6904 판결)

## 1. 사안의 개요

### 가. 당사자들의 관계

- 피고인 1 ⇒ 2022. 6. 1.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
- 피고인 2 ⇒ 경선 및 본선거 사무소 비서 및 자문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
- 피고인 3 ⇒ 선거캠프의 공보업무를 담당한 사람
- 피고인 4 ⇒ 비영리 사단법인(이하 'A 법인')의 단장으로서 선거캠프의 정책팀 간사로 활동한 사람
- 피고인 5 ⇒ 싱가포르 법인 대표로서 경영컨설팅과 투자자문 등 업무를 수행한 사람

## 나. 공소사실의 요지

### ■ ①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최된 '좋은기업 유치업무협약식'<sup>1)</sup> 관련

- 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 법인의 직무상 행위 및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 및 기업체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함
- ② 피고인 4는 A 법인의 비용으로 행사비를 지출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법인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, 선거운동 관련 이익을 제공함
- ③ 피고인 1은 위 ②에 대응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법인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
- ④ 피고인 5는 행사개최에 관한 컨설팅 대가를 지급받아 선거운동 관련 이익을 제공받음

### ■ ② 제주 지역 각 단체 지지선언 관련

- 피고인 1~3은 당내 경선에 대비하여 직능별·단체별 지지선언을 추진한 뒤 ①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, ② 촛불백년서귀포이사람, ③ 121개 직능단체 회원 및 가족, ④ 2030 제주청년 3661명, ⑤ 제주대 교수들로 하여금 피고인 1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게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함

## 2. 소송경과

### 가. 제1심

■ 피고인 1 ⇒ ①-① 중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 부분 유죄[벌금 90만 원], 나머지 무죄

■ 피고인 2, 3 ⇒ ①-① 중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 부분 및 ②-①, ②, ③, ④

---

1) 피고인 1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'기업 육성·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' 관련 행사

부분 유죄[피고인 2 : 벌금 500만 원, 피고인 3 : 벌금 400만 원], 나머지 무죄

■ 피고인 4 ⇒ ❶-① 중 거래상 특수한 지위 이용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 부분 및 ❶-② 부분 유죄[징역 6월 집행유예 2년], 나머지 무죄

■ 피고인 5 ⇒ ❶-① 중 거래상 특수한 지위 이용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 부분 및 ❶-④ 부분 유죄[벌금 300만 원, 5,482,456원 추징], 나머지 무죄

## 나. 원심

■ 피고인 1, 2, 3 ⇒ 쌍방 항소기각

■ 피고인 4 ⇒ 파기, ❶-① 중 거래상 특수한 지위 이용 선거운동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 외에는 제1심과 동일[벌금 500만 원]

■ 피고인 5 ⇒ 파기, ❶-① 중 거래상 특수한 지위 이용 선거운동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 외에는 제1심과 동일[벌금 300만 원, 5,482,456원 추징]

■ 원심의 유·무죄 판단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피고인 1 | 피고인 2 | 피고인 3 | 피고인 4 | 피고인 5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❶<br>‘좋은기업<br>유치업무협<br>약식’ 관련    | ① 중 직무상 행위<br>이용 선거운동     | 무죄    | 무죄    | 무죄    | 무죄    | 무죄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중 거래상 특수한<br>지위 이용 선거운동 | 무죄    | 무죄    | 무죄    | 무죄    | 무죄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중 선거운동기간<br>전 선거운동      | 유죄    | 유죄    | 유죄    | 유죄    | 유죄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중 선거운동 관련<br>이익제공  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유죄    | -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중 정치자금 기부          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유죄    | -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정치자금 수수                 | 무죄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
| ❷ 제주<br>지역 각<br>단체<br>지지선언<br>관련 | ④ 선거운동 관련<br>이익수수    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유죄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단체                       | 무죄    | 유죄    | 유죄    | -     | -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단체                       | 무죄    | 유죄    | 유죄    | -     | -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단체                       | 무죄    | 유죄    | 유죄    | -     | -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단체                       | 무죄    | 유죄    | 유죄    | -     | -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⑤단체                       | 무죄    | 무죄    | 무죄    | -     | -     |

#### ▣ 원심의 주된 판단 이유

##### ● ① '좋은기업 유치업무협약식' 관련

- 피고인들이 사전선거운동을 하였음은 인정되나[유죄], A 법인의 구성원 등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[무죄]
- 피고인 4의 A 법인 자금 사용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지만[유죄], 피고인 1은 A 법인 자금이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음[무죄]
- 피고인 4가 피고인 5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피고인 5가 이를 수수하였음이 인정됨[유죄]

##### ● ② 제주 지역 각 단체 지지선언 관련

- ①, ②, ③, ④단체의 지지선언은 선거캠프에서 관여(주도)한 것으로 인정되나, 실무 선에서 이루어져 피고인 1의 공모를 인정하기 부족함[피고인 1은 무죄, 피고인 2, 3은 유죄]
- ⑤단체는 자발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보임[무죄]

### 3. 대법원의 판단

#### 가. 쟁점

- ▣ 직무상 행위 이용 및 거래상 특수한 지위 이용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
- ▣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사람에게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는다 인식하였는지 여부
- ▣ 직능별·단체별 지지선언의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 여부

#### 나. 판결 결과

- ▣ 쌍방 상고 모두 기각(원심 수긍)

#### 다. 판단 내용

- ▣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

-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,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

▣ 피고인 1~4의 상고이유에 대하여

-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,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